현장과 시각

21개월간 15차례 인사라니

장필수
사회2부 차장

담양군의 잦은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달 27일자로 서기관 승진 2명과 시설 5급 전보 2명 등 모두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만 놓고 본다면 소폭인데다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만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3번째 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담양군은 지난 2월 11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100여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3월에도 소폭 인사를 했다.

올 들어 매달 한번꼴로 이뤄진 담양군의 잦은 인사는 사실 민선 4기들어 고착화 됐다. 담양군은 민선 4기 출범 직후인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1개월동안 무려 15번의 인사를 했다.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42일만에 한번꼴로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담양군은 민선 4기 출범직후인 2006년 7월 첫 인사를 시작으로 그 해에만 4번, 이듬해인 2007년에는 8번의 인사를 단행했고 2008년에도 벌써 3차례의 인사를 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횟수의 인사로 인해 3~4차례 자리를 옮기거나 업무 파악조차 안된 상황에서 몇개월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는 직원들이 생겨나면서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잦은 인사도 문제지만 인사 배경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높다. 담양군은 인사를 자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승진이나 전입 등 인사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 및 보복인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군수가 민선 4기 선거과정에서 자기편에 선 사람에게는 보은인사를, 상대편 사람에게는 보복인사를 하고 있다는 평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부읍장을 부면장 밑의 '담당'으로 발령을 낸 것이나, 20대 일용직 여직원을 남자들도 근무를 꺼리는 납골당으로 발령을 낸 것이 대표적인 보복인사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군수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이 ○○면으로 몰리다 보니 이곳을 가르켜 '귀양지'로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다.

인사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투명한 인사를 할때만이 그 권한도 인정을 받게 된다.

지역민들은 제갈량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한 유비는 아닐지라도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잡인 시각을 가진 군수를 원하고 있다.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수시 인사의 횟수를 줄이고 채용과정의 공개 등을 통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담양군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 bungy@kwangju.co.kr

광주시 기초의원 재산 평균 4,800만원 늘어

광주시 기초의원의 재산이 지난 1년 동안 평균 4천86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도 재산 변동사항' 신고 대상자인 광주시 5개 자치구의원 68명의 지난 1년간 재산 평균 상승액이 4천868만 7천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 부문 1위는 남구 최민순 의원으로 9억5천673만원(재산 총액 34억4천835만원) 상승했으며, 전양복 광산구 의원 7억6천500만원, 선덕희 광산구 의원 5억7천217만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준 의원은 남구 박춘수 의원으로 7억5천690만원 감소했으며, 서구 장재성 의원은 6억1천993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구의원 가운데 재산총액 1위는 북구 구희호 의원으로 52억2천353만원이었으며 남구 최민순 의원 34억4천835만원, 같은 구 김만곤 의원 25억7천728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시 유관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임원은 임의수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으로 모두 15억7천356만원이었으며, 이희옥 도시공사사장은 13억7천488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기초의원 재산보유 순위 (단위:원)

순위	성명	직위	총액	증감
1	구희호	북구의원	52억 2천 353만	+5천 228만
2	최민순	남구의원	34억 4천 835만	+9억 5천 673만
3	김만곤	남구의원	25억 7천 728만	+3억 4천 86만
4	선덕희	광산구	22억 9천 274만	+5억 7천 217만
5	최운초	북구 부의장	22억 5천 853만	+1억 2천 586만
6	김상용	북구 의장	20억 304만	- 1억 7천 710만
7	김순례	북구 의원	17억 2천 177만	-7천 53만
8	이은방	북구 의원	13억 3천 865만	+2억 5천 10만
9	유혜자	서구 의원	13억 57만	+1억 7천 278만
10	심재섭	북구 의원	11억 9천 424만	- 4천 49만

수백억대 인건비 편법 지급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 결과…채용·인사 비리도 심각

일부 공공기관이 수백억원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인건비 편법인상을 비롯해 채용 비리, 방만·편법인사 등이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일부 공공기관 임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유흥경비로 사용했고, 정치활동에 집중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해당 임직원의 책임을 규명해 문책조치하고, 종합감사결과는 기관별 경영실적 및 임원평가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마사회는 2001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 부당지급했고, 2004년 11월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을 예산에 재편성해 초과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직급별로 14만8천원~9만원을 지급하다 2006년 12월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법인상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편법으로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2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토지공사는 정부지침에 위배해 사내복지기금을 과다출연, 2003~2007년 265억 8천400만원의 기금을 급여성으로 편법지급했다. 공사 30주년 기념 명목으로 매월 2-18만원을 직원 계좌에 입금,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53억3천300만원을 지급했고, 개인연금저축 지원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매월 9만원을 지급하는 등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12억5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005~2007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를 한도초과해 집행했다. 특히 임원들은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경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했고, 골프접대비, 상품권 구매, 보석구입 등에 8억4천800만원을 사용했다. 또 이사회를 제주도 소재 골프장,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하는 등 최근 3년간 이사회 행사비로 9천700만원을 집행했다.

또 한전KDN 감사 A씨는 공휴일과 휴가 중 833만원, 스포츠 의류용품 구입에 119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1천13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2006년 3월 임명 이후 2008년 1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등 정치활동을 위해 14차례에 걸쳐 출마예정지를 방문했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2월부터 낙천한 3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정당을 방문했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연합뉴스

"南언동 남북관계 악화 6자회담 영향"

조총련 기관지 보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31일 북한 핵공격 대책에 관한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언동'을 잇달아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럴 경우 6자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조선신보는 '평화번영의 기회 찌부러뜨리는 위험한 도발'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현재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면타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북남관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기는 커녕 동족을 심히 자극하는 언동을 되풀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특히 "만약 남조선당국의 도발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될 경우 그것이 6자회담 합의이행과 핵문제해결의 과정을 역전시키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고 말해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6자회담 진전과 10.3합의 이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신문은 현재 "조선반도에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재작년 조선이 지하핵시험을 단행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된 이래 최악의 대결구도라고 할 수 있다"며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를 통해 분계선을 넘었던 것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느껴질 만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북관계를 '선핵포기'의 맥락에서만 언급하고 상대의 의향에 대한 확인도 없이 '비핵·개방 3000구상'과 같은 정책구호를 일방적으로 내걸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두둔하는 눈으로 보면 핵문제가 풀릴 경우 새 정권은 선행정권보다 북남관계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될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지지해 줄거죠"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버넘의 'J.P. 에드워즈 그릴 앤드 바'에서 식사중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힐 6자회담 美 수석대표

오늘 방한 북핵 조율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일 서울에 온다.

2일 출범하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센터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지만 북핵 외교가의 시선은 온통 북한 핵문제에 쏠려있다. 힐 차관보도 방한 기간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하는 등과 잇따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낸다.

지난달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회담이후 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힐 차관보가 3일까지 체류하는 동안 북한측이 모종의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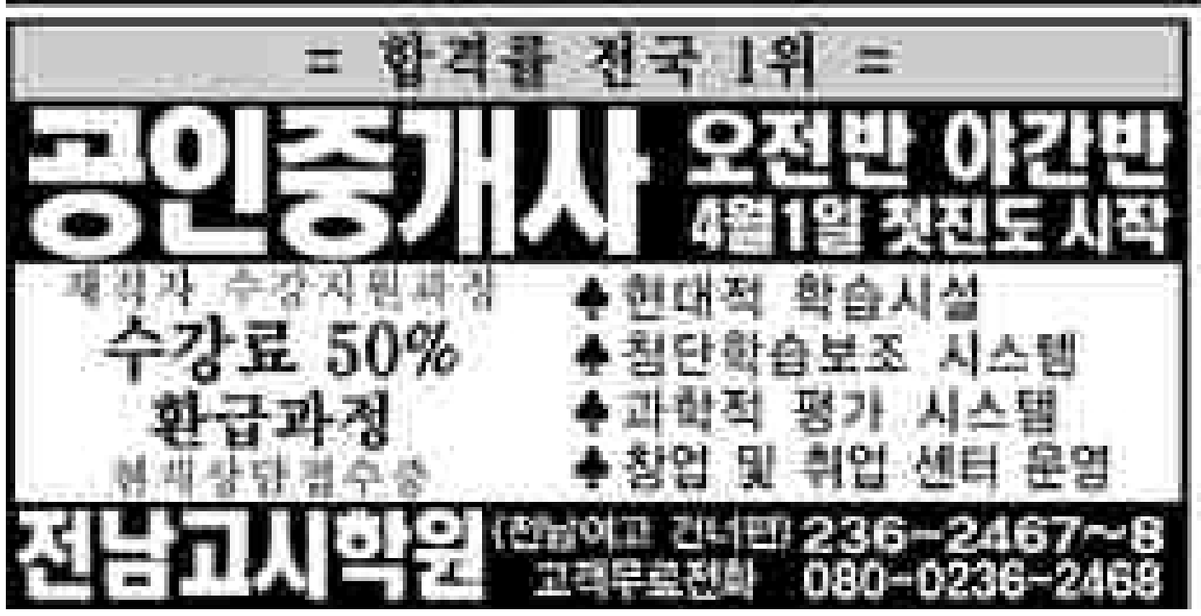
中, 티베트 시위대 414명 체포

중국은 유혈시위가 발생한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서 방화나 살인을 한 혐의로 시위대 414명을 체포했다.

중국 시짱일보는 지난달 31일 장자이핑 라싸시 공안국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 공안기관이 지금까지 시위대 414명을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장 부국장은 "다쯔현 3.15사건과 이춘매장, 홍위 의류매장, 화화공쯔 의류매장 등 4개 지점 방화 및 살인 혐의자를 전부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까지 자수한 시위대는 핵심 불법분자 6명을 포함해 모두 289명"이라면서 "이중 범죄가 가볍거나 죄를 뉘우친 45명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메콩강 유역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달라이 라마에 대해 티베트 시위 종식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총리는 이어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독립 입장을 포기하고 티베트와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임을 인정한다면 대화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는 티베트사태를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티베트 인권단체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시위 진압에 나서면서 티베트인 시위대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승려 수백명이 구금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